

光州日那



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(062) 222 - 8111 kwangju.co.kr 제19885호 1판 (음력 10월 19일)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

한전·KT 나주서 손잡고 "에너지 신산업 선도"

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대 협력사업 공동 추진 광주·전남 미래 먹거리 선도 '빛가람 에너지밸리' 협력

광주·전남 공동혁신도시(빛가람도시) 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이 KT와 정보통신 및 에너지 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 시장 개 척에 나선다. 광주·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 업을 선도할 '빛가람 에너지밸리' 조성에 도 협력하기로 했다.

두 회사는 먼저 광주·전남지역 1000여 가구에 LTE 통신방식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(AMI) 실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.

조환익 한전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9일 나주 빛가람도시 한국전력 신사옥에 서 '스마트그리드(Smart Grid) 협력사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한 발표회'를 열고, ▲LTE 활용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 라 구축 ▲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▲전 력+통신 빅데이터 융합 연구개발 ▲글로 벌 마이크로 에너지그리드 등을 4대 협력 사업으로 선정, 추진한다고 발표했다. 지 난 5월 체결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양해각 서에 바탕한 내용으로, 7개월간의 협력방 안 모색을 통해 나왔다.

두 회사는 우선 내년 5월까지 LTE 기반 의 지능형 AMI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국 내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. LTE 모뎀과 지능형계량기를 가정에 설치한 뒤 검침 내용을 무선으로 한전에 전달하는 방 식인데, 시범사업은 광주·전남 및 서울의 2000가구가 대상이다. 실시간 원격검침으 로 전략사용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양측 은 2017년까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되는 글로벌 AMI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.

? 스마트그리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(IT)을 접 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. 에너지 효율 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.

또 국내 관련 기업들과 특수목적법인 (SPC)을 설립한 뒤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. 한전이 사업을 총괄하 고 KT는 서비스 운영 등을 맡는다. 320억 여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3년간 제주도 전 역과 전국 공공기관에 5500여개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. 국내 대표 전기 차로 자리매김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쏘울EV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

또 '전력+통신 빅데이터'를 분석, 제공 해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이끌어내는 한 편, 국가적 에너지 활용 최적화 및 효율화 에도 힘을 다하기로 했다. 특히 국내 기업 과 협력해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등 스마트 그리드 해외사업 모델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. 이 사업은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섬나라에 풍력·태양광과 같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(ESS) 를 적용해 에너지 자립을 돕는 것이다.

아울러 한전과 KT는 한전에서 추진 중 인 광주·전남권 '빛가람 에너지밸리(En→ ergy Valley)'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 지 역 혁신클러스터 정책과 연계한 전력과 정 보통신기술 융합 R&D협력을 선도하겠다



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사옥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(왼쪽)과 황창규 KT 회장이 국내 대표 전기차인 기아차 쏘울EV 를 충전하고 있다. 〈한국전력 제공 〉



는 것이다. 특히 광주·전남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이끌어 공 공기관 지방이전 모범사례로 확립하겠다 는 계획도 세웠다.

조환익 한전 사장은 "이번 발표는 한전

법안심사 보류…운영주체 못 정해

15일 개회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

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뒤, 전력분야 의 글로벌 나주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"이라며 "국내 에너지밸리의 토대를 구축해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선도하 겠다"고 의지를 다졌다.

황창규 KT 회장은 "한전과의 4대 통 신·전력 융합사업을 중심으로 KT 스마트 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내외에서 가 시적인 사업성과를 조기 달성할 것"이라 며 "국가 에너지 해결과 동시에 에너지 신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"고 밝혔다.

/임동률기자exian@kwangju.co.kr

"아이폰 AS 불공정"

광주 30대가 애플 이겼다

30대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 는 애플의 '애프터 서비스(AS) 방침' 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 을 받아냈다.

'다윗'이 '골리앗'을 쓰러뜨렸다는 평가속에 업계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목소리가 글로벌 기업 애플의 AS 방 침을 변경하는 기폭제가 될 지 주목하 고 있다.

광주지법 민사 21 단독 양동학 판사 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(30)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.

오씨는 이번 승소 판결로 휴대폰 구 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, 사 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 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 을 더한 152만7000원을 받게 됐다.

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'아이폰 5' 를 구매한 뒤 사용해오다 다음해 11월 배터리 이상 증상으로 수리를 맡겼다. 하지만 수리 업체 측은 "수리가 어려 우니 34만원을 내고 '리퍼폰'을 받아 가라"고 답변했다.

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. 오씨는 추가 비 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휴대전화를 돌 려달라고 요청했지만 "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"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. 앞서 그는 청와대 문고, 한 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 원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무산됐었다.

경실련도 애플의 AS 방침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입 장에서 불공정하다는 소비자들의 목 소리를 반영,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.

오씨는 "항소, 상고로 3년이 걸리 든, 5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"고 말했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'**전두환 범종' 소유권 누구에 ▶**2면 송년회 제대로 즐기기 ▶18면

24면 발행·호남 최대부수

문화전당 내년 개관 '특별법'에 또 막히나

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내년 9월 개관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.

지난 4일 국회에서 의원들간 견해차로

∰광신대학교

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(금)~24일(수) 문의: 062)605-1114

개정법률안'(특별법)의 법안심사가 보류 된 데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.

8일 박혜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뤄 진 특별법안이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보류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.

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안은 지난 해 발의된 정부안과 박혜자 의원이 마련한

의원 입법안 등 사실상 일정 부분 상충하 는 2개 법안이다. 문화부가 제출한 안은 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개발원(특수 법인)에 위탁하자는 내용이다. 박 의원의 안은 문화전당의 위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 해 정부 소속기구가 운영을 맡되, 일부 기 능만을 법인에 위탁하자는 지역사회의 여 망을 담고 있다.

그러나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 화전당을 국가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의 처

법안 처리 지연은 문화전당 개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. 문화전당 운영주체 가 정해지지 않아 필수인력(423명)을 뽑지 못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개관 준비에 제 동이 걸린 상태다.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 진단 관계자도 "특별법 개정이 연내에 이 뤄지지 않으면 문화전당을 내년 9월에 개 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"고 설명한다. 내년 임시국회 개회를 가늠할 수 없어 법안 처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

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. 최악의 경우 개관 을 불과 5개월 여 남겨두고 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뽑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.

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은 "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는 법안의 연내통과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"라며 "국회는 물론 광주지역 사회에 서도 법률안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"고 말했다.

/윤영기기자 penfoot@kwangiu.co.kr

